

<보도자료>

경기도는 1주년, 광주는 오늘!

서울도 서두르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때: 2011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곳: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코리아나호텔 옆)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경과와 학생인권조례 전국상황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참가자 발언

1) 학생인권 · 교육자치 후퇴 부채질하는 교과부 규탄

-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 학생인권조례, 서둘러 학교현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 김두림(전교조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년의 경험과 서울학생인권조례

- 혜원(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 공동기획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4)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 이종걸(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3. 기자회견문 낭독

[자료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경과와 현재 상황

■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이 전국화하기까지

-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움트기 시작.
-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
-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미션스쿨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교과부 지침이 보완되기 시작.
-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화,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 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08년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 관련 교과부 지침이 모두 폐지되고, 교육청 차원의 자율 지침으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교육자치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여건 조성

▷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 당선. 서울, 광주, 전북 등 교육청 산하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최종 성사. 교육청 발의를 기대하기 힘든 경남에서도 주민발의운동 전개. 충북에서도 주민발의운동을 결정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음.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주요 경과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2010년 10월 5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회> 개최
-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예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6월 22일~26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

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 2011년 6월 27일~7월 4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 2011년 9월 7일, 광노현 교육감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 2011년 9월 8일,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공청회 개최. 주민발의안에 비해 상당수 후퇴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본부 이름으로 강력한 수정 요구

▷ 2011년 9월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 재검토 필요하다'며 외압 행사

▷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 2011년 9월 20일,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 여러 명의 얼굴에 대결레를 문지르는 '대결레 체벌' 사건 발생. 이튿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지만, '훈육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며 문제를 축소.

▷ 2011년 9월 21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기소. 교육감 직무정지.

▷ 2011년 9월 28일,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의제에 대하여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지속 추진과 지연, 무산까지 다양한 해석 나와.

▷ 2011년 9월 2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11곳,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정책 등을 방조해 온 임승빈 권한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교과부에 경질 촉구.

▷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 현황

● 경기도 : 2010년 제정. 2011년 본격 시행

● 서울 : 2011년 8월 주민발의 성사. 9월 30일 의회 송부.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중 조례안 제출 계획을 갖고 있으나 변동될 가능성 있음.

- **광주** : 2011년 8월, 광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9월 26일 시의회 교육상임위 통과. 10월 5일 본회의 통과 예정
- **전북** : 전북교육청에서 6월 말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지지 서명운동 진행 중.
- **강원** :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반기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계획.
- **전남** :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로 추진 중. 8월말 조례안 초안이 발표되고 2차례 의견 수렴 공청회가 개최. 이에 대해 교육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단체들의 비판이 상당한 상태.
- **경남** : 2011년 5월말 경남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시작. 현재 주민발의 서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 **경북** : 2011년 2월, 전교조경북지부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발표. 학생 차별과 강제학습 등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교사, 학생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높은 동의를 나타냈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모색 중.
- **충북** : 시민단체들이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내부 교육과 간담회와 함께 주민발의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
- **울산** :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사전 작업으로 학교들의 개정학칙(체벌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학칙을 개정했음)에 대한 조사 작업, 학생인권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음.
- **대구** : 대구교육청에서 '교육권리현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구학생인권연대 숨통'(아수나로, 반딧불이, 전교조, 참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권리현장에 대한 비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할지 여부는 미정.
- **충남** :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추진 준비 단계.
- **인천** : 여러 단체가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9월 29일 '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먼저 의원입법 형태로 인천시의회 통과.
- **제주** : 2011년 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에 관한 도민 요구조사를 진행. 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 요구는 높게 파악되고 있으나, 주민발의 여부는 미정.
- **부산** : 움직임 없음.
- **대전** : 움직임 없음.

[자료 2]

[기자회견문]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부쳐

거센 격랑을 뚫고 종착지에 도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지난 9월 30일 마침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서울시민의 열망에 거슬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역풍이 또다시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도 뜨겁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단지 교육감 개인이 갑작스레 내놓은 작품이 아니라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로부터 우러나온 정책이다. 사람으로 존중받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교육, 민주주의의 참뜻을 몸소 익히는 교육,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집약된 정책이다.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온 법적 현실을 교육자치를 통해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다. 적게는 서명에 참여해준 서울시민 10만의 지지를, 넓게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에 관한 서명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마음을 졸였던 청소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서울교육감의 부재라는 공백을 틈타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고자 부당한 음해를 일삼는 교과부와 일부 보수세력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기본적인 상식과 염치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최후의 열쇠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때마침 광주시의회에서도 교육청이 발의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육청 발의보다 더 깊고 큰 뜻을 지닌 주민발의로 마련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봄이 만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심의·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 하의 서울교육청이 눈치보기 행보에 빠지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를 수 있도록 의회가 견인해야 함도 물론이다.

서울시의회는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본디 취지와 서울시민의 뜻을 살려 조례안을 심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갖대로 충실히 써내려간 시민입법의 결실이다. 앞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척하면서 갖가지 위헌적 의무의 족쇄로 권리를 질식시켜온 학교의 고압적 권위주의로부터, 학생의 폭력은 문제삼으면서 학생에 대한 폭력은 도외시해온 교육의 모순으로부터, 장애와 성적 지향, 빈곤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행되어 온 차별과 배제로부터,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기심으로부터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지혜의 소산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계산에 휘둘러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몹시도 길었던 장마와 태풍에도, 때이른 추위에도 버는 고개를 숙이고 과실은 익는다. 학생 인권과 민주교육을 향해 무장 타오르고 있는 시민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화답할 차례다.

2011년 10월 5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참고자료]

학교안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실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지난 9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초안 발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권리조항이 제외된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상담소에서는 그간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접수한 차별 사례들을 공개함으로써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당하고 근거없는 동성애 혐오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교사의 혐오발언 / 집단 따돌림 / 입학 거부 / 폭언 및 폭행 / 공공연한 아웃팅 문제로 나눠보는 상황들은 여전히 학교 안의 십대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 침해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래의 차별 사례들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상담게시판에 실제로 게시된 내담글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별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지역/나이(학년)/학교 유형 등의 구체적 정보는 모두 삭제 또는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및 권리를 보장하는 항목을 요구하는 바이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이 같은 차별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교사의 혐오 발언

[사례 1] 2011월 4월

며칠 전 수업 시간에 나이 지긋한 선생님께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공감아 되는 이야기여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교육을 잘못 받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그 왜,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교육의 피해자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라고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동정하는 시선을 가진 선생님의 발언이 매우 불편했어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례 2] 2010년 09월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드라마 <인생을 아름다워>를 얘기하면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하면서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했더니 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러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두렵습니다.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누군가 내가 이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웃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사례 3] 2010년 09월

저는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은 악마의 유혹이며,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고 해요. 상담소 FAQ에는 성경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이자고, 대충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나쁜 것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면, 동성애는 혹시 나쁜 것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선생님께서 틀리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저는 악마인 건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사례 4] 2009년 9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호모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는 줄 아니? 똥독이 올라서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웃었고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한 사람은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는 선생님들에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5] 2005년 8월

제 애인의 담임 선생님께서 (남자 선생님인데)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정말 친한 두 애가 있어요. 저희 반은 따로 다 떨어져 앉았는데 그 둘만 붙어서 매일 장난하는데, 둘이 워낙 친구 사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시고 “딴 애들은 다 떨어져 앉아있는데 너희 둘만 붙어있네. 요즘 애들 다 왜 그러냐.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고, 매일 같이 다니고, 너희 둘 레즈 아니냐? 정신병원에 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검사 좀 받아봐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레즈비언이 잘못된 겁니까! 레즈비언이 다 정신병자입니까?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2. 집단 따돌림

[사례 1] 2011년 3월

저는 여고에 다니는 동성애자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저의 학교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절 자꾸 쳐다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밥도 먹질 못합니다. 정말 학교 가기 싫고,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2] 2010년 6월

제 절친한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제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직접 소문을 퍼트렸어요. 문자 메시지를 애들끼리 돌려 읽었다네요. 학교에서 소문이 그냥 잠깐 돈 줄 알았는데, 애들한테 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욕먹고 인상 쓴 표정을 지어서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겁났지만 소문이 차츰 가라앉았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문이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여자한테 돈 받고 몸 파는 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저 혼자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낸 애들까지 욕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겁이 나고, 다른 어른들께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자퇴입니다. 하루가 일 년 같이 느껴져요. 이런 결정 이런 생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어머니께서

참으라고 버티라고만 하시니 정말 미쳐 버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입학거부

[사례 1] 2009년 12월

저는 FTM 트랜스젠더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고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와 제 가족들 모두 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며 저는 제가 활동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트랜스젠더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다, 그러니 취소하겠다면서요. 알아보니, 그 학교에 합격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제 글을 보고는 학교 측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런 애를 자기 딸과 같은 기숙사에 머물게 할 수 있는냐고요.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서 입학하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엄마는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고 저더러 이게 사실이냐고 다그치고 이런 일로 인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하십니다. 전 학교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려봤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세요. 학교에 가서 제가 여자인 게 맞는 거라고 말하라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4. 폭언 및 폭행

[사례 1] 2008년 12월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A,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둘은 서로 친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둘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제게 해코지를 하네요. 몇 주 전부터 우리 반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절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며칠 전 다른 반 친구를 통해서, 그게 B라는 아이가 제 이야기를 애들에게 다 퍼뜨려서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월 들어서부터는 야자 시간에 야자를 하러 자습실에 올라가면 제 책상만 빼놓아져 있고, 책상 앞부분에 책상을 발로 마구 찬 발자국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옆에 달린 사물함을 열어보면 제 책이 엉망이 되어 있고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전 '뭐 이번 한 번만 이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오늘까지 이러네요. 정말 요즘에 학교 너무 가기 싫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선생님에 의한 공공연한 아웃팅

[사례 1] 2006년 05월

여고생입니다. 중2 초에 처음으로 이반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정체성 문제 때문에 힘들어 짧은

시간 자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알아버렸습니다. 부모님들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렸죠. 저는 고1 중간고사도 채 마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하셨는지, 충격이 크셨습니다. 반년은 요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한 달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들, 모두 싸늘한 눈초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학 중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애가, 한국 생활을 벗어나 좀 더 넓은 곳에 가면 바뀔 거야. 글썄요. 저도 그러길 원했지만 이렇게 또 상담소를 찾아 왔습니다.

[사례 2] 2007년 10월

중학생이고, 사귀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시곤 노발대발하시며 학교에 연락은 물론 제 여자 친구를 전학 보내겠다는 말을 하시며 겁도 주셨습니다. 그래도 꾀꾀 버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선생님께 연락을 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유난히 저희를 지적하고 갈라놓으니, 학교 애들이 알게 됐는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둘이 사귀다, 레즈넨이다, 변태다, 키스하는 걸 봤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가만 계실 수 없었는지, 선생님들마저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며 떼어 놓으려 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제게 남아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